

‘계단붕괴 사고’ 여수 거북선 활용 고심

시민들 “보수 후 재개관”...‘선소 이전’ 요구도

市시 “안전진단·활용방안 용역...신중히 결정”

여수시가 1년 전 계단 붕괴사고가 난 이순신광장 거북선 조형물의 활용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8일 이순신광장에 설치된 거북선 조형물을 관람하고 내려오던 관광객들이 계단 붕괴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일가족 5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사고가 난 거북선 조형물은 계단을 철거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로 재개장이 미뤄지고 있다. 추락 사고를 당한 부상자들과 보상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의견도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거북선 조형물을 보수해서 다시 문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조성한 거북선을 시민의 휴식공간에 그냥 방치해선 안된다는 것이 이유다.

다른 한쪽에서는 거북선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제작한 장소로 알려진 여수시 시전동의 ‘선소 유적’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도 있다.

이에 여수시는 이달부터 거북선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과 함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에 착수했으며, 8월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재개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소 이전 목소리에 대해서는 시가 추진 중인 ‘선소테마정원 조성 사업’과 연계해 전시 운영하는 방안을 문화재청 등에 질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시설



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함께 전체 리모델링, 다각적인 활용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형물은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본영인 진남관(鎭南館)에서 남쪽 방향에 있는 이순신광장 끝에 2014년 설치됐다.

길이 26.24m, 높이 6.56m, 폭 10.62m 규모의 거북선은 내부 공간에 조선시대 수군 밀랍 인형과

무기류 등이 전시돼 있다. 내부 공간의 뒤편에는 거북선을 지휘하는 장군상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등 독특한 외형과 불거리로 인해 한해 30만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시설이었다.

국비와 시비 등 26억여원이 투입된 거북선 조형물은 개관 직후부터 빗물이 새면서 부실시공 의혹이 일기도 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경찰, 놀이터서 여아 추행한 30대 구속영장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아 아동의 신체를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57분쯤 전남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동 B양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성이 아이를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대학 도서관 여자화장실 물카 20대 벌금 800만원

대학교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2시50분쯤 광주의 한 대학교 중앙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침입,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길거리서 여친 폭행한 60대...말리는 행인도 때려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여자친구를 때리는 것을 말렸던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A씨(60)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4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식당 앞 노상에서 B씨(47·여)와 C씨(45)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길에서 자신의 애인과 다투다 격분해 주먹을 휘둘렀고 길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B씨 등이 “왜 여자를 때리느냐”며 만류했다.

B씨 등이 A씨의 폭행을 말리는 사이 여자친구가 달아났고 A씨가 “내가 내 여자친구를 때리는데 무슨 상관입니까”며 이번에는 말리는 이들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 등도 이에 대해 A씨의 먹살을 잡고 밀쳐 썩방 폭행으로 함께 입건됐다. A씨의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는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은 따로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을 입건한 후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돈 달라며 70대 노모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건물 이전비 등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어머니를 폭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특수협박, 존속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11일 사이 전남에 거주하는 어머니 B씨(71)의 집에서 건물 이전비 등 돈을 달라고 요구, 이를 거절하자 주먹과 발로 B씨에게 다발성 녹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5일 오후 9시쯤에도 어머니 집 주방에서 ‘며칠만 봐 달라’며 양손으로 비는 B씨에게 ‘같이 죽자’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다른 자녀 명의로 매입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달라며 수천만원의 이전비 등을 B씨에게 요구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존속폭행은 형법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B씨는 공소제기 후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장은 이에 A씨의 존속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김민정 기자

‘마약 원료’ 양귀비 기른 노인들 적발

광주·전남지역에서 마약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양귀비를 기른 노인들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대부분 관상용이나 상비약 용도로 키우지만 판매해 불법이다.

9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전남 동구에서 집 옥상에 양귀비 350주를 기른 혐의로 A씨(62·여)가 입건됐고, 지난달 남구에서도 집 마당에 양귀비 270주를 키운 60대 남성이 입건되는 등 개화 시기(4~6월)를 맞아 적발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올 1~5월 적발한 것도 23건에 이른다. 입건된 이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씨가 날려 자생한 것’이라거나 ‘양귀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양귀비는 진통과 해열에 효과가 있어 민간에서 복통·기관지염·만성 참차염 등 치료에 쓰였다.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기르는 경우도 있다.

열매를 가공해 만드는 아편은 진통 효과가 탁월해 민간에서 음급질 환에 사용하기도 했다.

양귀비 재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어떤 목적이

든 국내에서 기를 수 없으며, 자생한 양귀비라도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편과 헤로인 등 마약 제조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의 재배는 물론 소지도 금지한다.

1주만 재배·소지해도 처벌 대상이지만 검찰은 재배 목적과 경위·면적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한 경찰관은 “과거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이나 외딴곳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는 사례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도심 주택에서 기르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1, 2주라면 자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수십, 수백주라면 보통 재배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에 경미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중대할 경우 구속되기도 한다.

법원은 1990년 집 담뭍 채소밭 도랑에 자생하던 양귀비 1주를 제거하지 않고 관상용으로 방치한 것을 재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고, 1972년 교육용으로 학교에 비치하기 위해 꽃양귀비를 사러다가 양귀비 종자를 잘못 산 학교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개인간 온라인거래’ 확산

전자거래 분쟁도 11% 증가

전자거래 분쟁상당·조정신청 건수 2만845건

개인간 온라인거래가 확산하면서 전자거래 분쟁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9일 발간한 ‘2020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2019년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상당·조정신청 건수는 2만845건이다.

이는 2018년 1만8770건에 비해 11% 증가한 수치다. 의류·신발(35.2%), 컴퓨터·가전(21.3%), 잡화(11.9%) 등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 형태별로는 사업자과 개인 간(B2C) 분쟁조정 신청이 전체 분쟁 조정 신청 건수의 63.3%(108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개인 간(C2C) 분쟁조정 신청이 31.4%를 차지하며 꾸준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해결을 포기하거나 타 조정기관을 찾았다가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이에 따른 전자거래도 가속화해 신중 분쟁과 피해구제 요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ISA는 사업자-개인 간(B2C) 전자거래분쟁 뿐 아니라, 사업자-사업자 간(B2B), 개인-개인 간(C2C) 분쟁 등 모든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

준솔루션